

韓 “관세와 무관” vs 美 “비관세 장벽”… 디지털 규제 충돌

美측,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촉구
정부 “온플법과 관세압박은 무관”
美측 문서에 ‘망 사용료’ 직접 거론
온플법·망 이용대가 법안심사 속도
업계 “국내외 동일, 통상 문제 아냐”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문제 삼으며 관세 카드까지 거론하는 가운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관세 압박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망 사용료가 직접 언급된 미국 측 서한을 두고 업계에서는 “사실상의 규제 중단 요구”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양국 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해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같은 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빅테크 규제가 관세 인상을 촉발했다는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배 부총리는 “디지털 규제와 관세 인상을 연관시키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주한미국대사대리의 서한은 한국 정부가 디지털 규제를 호혜적으로 고민해달라는 의견이었을 뿐, 관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세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 측이 보낸 서한의 내용은 국내 IT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보낸 서한에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촉구하며, 한국 내 디지털 이슈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강한 압박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동안 팩트시트에 담긴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를 사실상의 규제 면제

근거로 해석하며 한국 정부의 입법 추진을 견제하고 있다. 실제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를 근거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다. 미국의 서한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망 사용료 문제가 ‘네트워크 사용료’라는 명칭으로 직접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국회에는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게 망 이용 대가를 의무화하는 법안 4건이 발의된 상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며 논의가 재점화된 사안인데, 미국은 이를 명백한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CP가 속한 미국 측은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통상 문제를 제기해왔다.

온플법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를 오는 3월부터 본격화하기로 하면서 처리 속도가 붙고 있다.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금지 조항이 적용

되면 구글·애플의 검색 상단 노출이나 유튜브 뮤직 결합 판매 등 이른바 ‘록인(Lock-in)’ 전략이 제약을 받는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까지 더해질 경우 수수료 기반 수익 구조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 플랫폼 지배력을 흔드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미국 빅테크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 분석이다.

여기에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온플법과 구글·애플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까지 얹혀 있어,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의견 전달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국내 업계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망 사용료 등 해외 기업이 당연히 지불해야 할 대가를 미지불하면서 국내 기업만 비용 부담을 안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외 기업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제도는 통상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관세 25% 인상 예고 뒤, ‘쿠팡 제재’ 거론… 美 의회·밴스도 나서

WSJ “밴스, ‘쿠팡 제재 자제’ 경고”
美의회 “美 기업 표적이면 관세”
정부 “쿠팡·온플법과 관세 무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규제 움직임이 한미 간 외교 마찰로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한 배경에 쿠팡 제재가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 의회에서 제기되면서다. J.D. 밴스 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강력한 경

고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달 27일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밴스 부통령이 지난 23일 백악관에서 김 총리를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김 총리에게 미국은 쿠팡 등 기술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완화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심지어 미국 부통령실 내에는 쿠팡 문제를 전담하는 인력까지 별도로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쿠팡에 대한 제재 움직임을 개별 기업이 수가 아닌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기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선언으로 현실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7일 한국이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는 이날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공유하며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조치가 사실상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집권 여당이 공식 확인해 준 셈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철회할 여지를 남긴 만큼 쿠팡을 둘러싼 미국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 정부와 조현 외교부 장관도 관세 인상은 쿠팡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조현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미 국무부

와 접촉해 확인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쿠팡이나 온라인플랫폼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김 총리 역시 밴스 부통령과의 면담 직후 특파원들과 만나 “한미 관계는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11월 알려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이에 따른 한국 당국의 고강도 제재 검토다. 미국 측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둔 미국 기업 쿠팡을 겨냥한 비관세 장벽이자 차별 행위라고 보고 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설날장보기, 파주페이로 더 든든하게!

파주페이

2월 충전한도 100만원

파주페이 100만원 충전하면 10만원을 더!

기간 2.1.(일)~2.28.(토) **내용** 충전한도 100만원(인센티브 10만원)

문의 코나아이 ☎ 1899-7997 / 민생경제과 ☎ 031)940-4522

파주페이 신청하세요! 연중 10% 인센티브, 평상 시 최대 70만 원까지!
[온라인] 경기지역화폐 앱(파주시 설정)→카드 신청→우편 수령 후 등록→본인계좌 연결→금액충전·소득공제 신청→결제→이용내역 확인
[오프라인] NH농협, 단위 농·축협 방문→신청서 작성(신분증 및 파주페이 실물카드 지참)→현금 지급→카드 수령→소득공제 신청(고객센터)→결제



더 크게,
더 즐겁게,
더 따뜻하게!



안드로이드 IOS